

정부의 준비된 물 민영화 시나리오! **물산업지원법안 입법예고 연기 이후 상수도 민영화 동향 분석**

- 경북 포항 권역 동향을 중심으로

2008년 8월 12일

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사무국

1. 행안부의 경영 개선 명령(4월 25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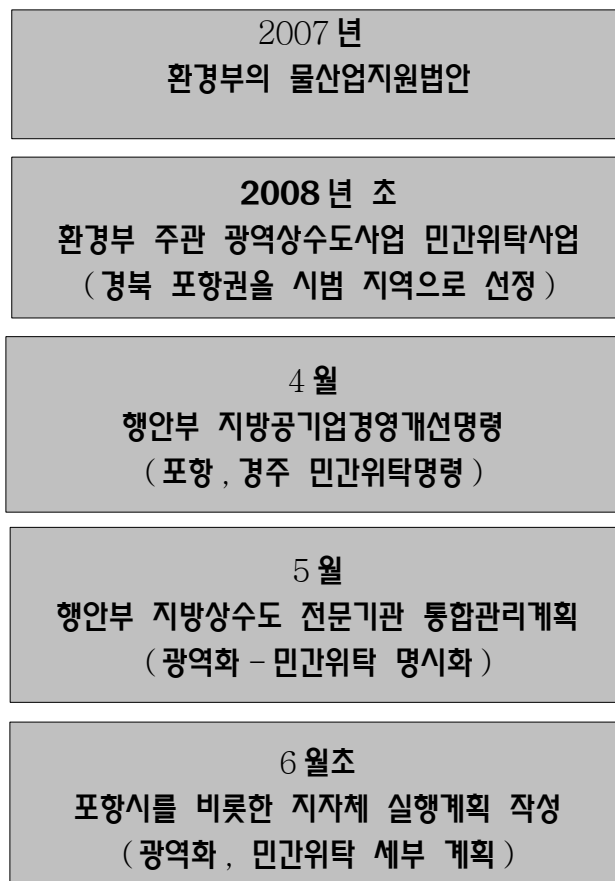
- 지난 200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진 9곳 중 3곳은 상수도 공기업. 포항, 경주, 통영.
- 포항과 경주는 지난 2007년 10월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각각 50만 이상, 50만 이하 25만 이상 지역 중 상수도 부문 최하위를 기록
- 개선 명령은 모두 상수도 사업의 전문 기관 위탁 실시를 핵심으로 함. 주요 내용으로 1년 내 상수도 전문 기관 민간 위탁을 실시할 것과 포항, 경주 등 인근 지역과 광역화를 감안할 것을 주문.(첨부 자료 참조)
- 포항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된 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핵심으로 지적. 경주의 경우 부채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높고 유수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.

2. 포항시의 세부 이행 계획 및 환경부의 광역상수도 민간위탁 시범 사업

-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행안부의 개선 명령에 따라 6월 2일 지방 공기업 경영 개선 명령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작성
- 주요 안으로 1년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, 환경부 주관 광역상수도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1안으로 논의.
- 환경부가 제시한 26개 중권역 중 경북 포항권(포항시, 경주시, 영천시, 영덕군, 울진군)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. 특히 경북 포항권은 환경부가 제시한 광역상수도 민간위탁 시범 지역.
- 환경부가 제시한 추진 계획은 1> 지자체간 MOU 체결 협의(- 08.06.05) 2> MOU 체결 및 협의체 구성(- 08.6.13) 3>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(- 08.12) 4> 사업 추진(09 -)

3. 정부의 시나리오

-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명분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개선 명령에 따른 것. (지방공기업법 제 75조에 따라 경영 개선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며,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, 재정 지원 불이익 등이 따름).
- 경주시 또한 1년 내 민간위탁 명령을 받은만큼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. 경주시의 경우 역시 자체 재정이 매우 부족하고(경주시 상수도 부채율 111.08%, 타지역 평균 19.88%), 적극적으로 광역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.
- 특히 경영개선명령은 민간위탁 방안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추가 조치를 따를 것을 명령하였고, 지난 5월 30일 “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 계획”을 발표, 추가 조치로 광역화-민간위탁을 명시적으로 주문하였음.
- 사실상 5월 30일 발표된 행안부의 통합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광역화-민간위탁 시범사업인 경북 포항권 광역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타겟으로한 행정적 조치.
- 이러한 행정적 조치 이외에도 상수도 광역화는 대운하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 역시 지니는 것으로 보임. 경부 대운하 건설 시 취수원, 관로 등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가장 많은 재원 소모가 필요한 지점 중 하나로 평가. 경부 대운하 건설의 이유 중 하나로 상수도 개선을 이야기하기 위한 선조치 성격 또한 존재. 이미 환경부의 광역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에 대운하 건설도 근거로 들어감. 포항은 또한 이상득의 지역구가 있는 곳.
- 이상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.



6 월 초
물산업지원법안 잠정 유보
(광역상수도 - 민간위탁 사업 속도 지연)

- 한편, 잠정 유보되었던 “물산업지원법안”의 유사 법안이 8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초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. 기존 물산업지원법안의 내용중 완전 법인화를 정부가 51%이상 소유하는 공사화 혹은 합작회사 정도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 광역상수도-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.
- 환경부 법안은 향후 개정을 염두해 두며 우선 경북-포항권의 광역상수도-민간위탁 사업을 지원, 가속화하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. 수도법에서 보장하는 민간위탁 사업자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거나, 수도사업에 민관합동법인(정부가 51% 이상 소유하는) 설립 등을 허용할 것으로 보임.